

이재명, '권성동 방식' 영장심사 출석 가능할까

8월 국회 중 영장 청구 땀 표결 원칙 민주, 체포안 표결 없이 출석도 고려 “회기 잘라서 심사...권성동 사례 있어” 회기 중단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야 국힘 “방탄에서 입장 바꿔...개인 비리”

검찰이 이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방식으로 '권성동 사례'가 언급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회기를 일시 중단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 회기 변경의 건'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다. 8월 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해야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회기 중단'이 성사될 수 있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쌍방을 그릇 대륙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월

중순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지난달 31일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고 비회기를 만들어 영장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전의 권성동 국민의힘(의원) 방식으로, 8월 결산국회 때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여야가 합의해 회기를 잘라서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랜드 채움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권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여야에 국회 회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비회기 기간에 영장심사를 받았다. 국회는 오는 15일까지 회기가 열리지 않는 '휴지기'를 갖는다. 이 기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 대표는 곧바로 법원에 출석

해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국회 회기 기간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필요를 인정할 경우 회기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김영진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치적인 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심사) 받으려 가겠다는 것"이라며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권성동 의원은 (회기 변경을) 해주고 이재명 대표는 안 해줄 이유가 있나"라며 여야 합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같은 민주당의 시나리오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될 경우 '방탄 정당'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정치적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다만 소수 여당 입장에서 수해복구 지원법 등 현안과 윤석열 정부 2년차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제1당인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표께서 여야와 협의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회기를 중단하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회기를 중간에 자르거나 임시국회를 빨리 종료한다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자연스럽게 않다"며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걸)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씀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는 이와는 별개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제'를 꺼내 들었다. 특권 포기로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겠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이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결국 이 대표가 민주당 내부 사정 때문에 (표결하지 않고) 일반인처럼 심사받으려 가겠다고 한 것 아닌가"라며 "이제까지 '방탄'하다가 입장을 바꾼 게 말이 되나. 이 대표 개인 비리를 가지고 우리가 (회기 중단까지) 해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대거 이탈표'가 나오며 따라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검찰이 또다시 체포동의안을 청구해 표결이 이뤄질 경우, 가결표와 부결표를 놓고 '비명계 색출'이 재현되는 등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곧바로 영장심사가 열리게 될 예정인데, 이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비회기 기간인 오는 16일 전에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이 이르면 이달 초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법조계에서는 수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변용일기자

박용진 의원 “혁신위, 혁신 내용보다 발언이 논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향해 “혁신위의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혁신의 내용에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제시되고 있지 않아 오히려 혁신위 구성원들의 발언이 더 논란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연의 임무에 보다 더 충실하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에 대해 "본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많고 국민적 이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인 만큼 본인도 유감의 표시를 했지만 보다 명징하게 사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매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적었다는 데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으니 사죄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취지가 노인 비하나 국민 모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왜곡되게 전달되고 본인 취지와 다르게 전달된 것에 대해서는 보다 명징하게 국민에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는 "무슨 일만 하면 문재인 정부를 몰고 늘어지던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부터 장·차관까지 전부 '문재인 합창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 구성원으로서, 여당 의원으로서 비루한 줄 아셔야 한다"며 "지금 100명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승민 한 명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를 향해서는 "공산당 언론이라고 했지만 본인이 공산당 수준의 통제력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머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된다"며 "공산당식 방통위원장이라고 비판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슬비기자

민주, LH 국정조사 제안에 “비리는 검찰이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계에서 한국도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부실시공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비리 문제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고 특히 국토부 관련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건 국정조사와 엮여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과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LH는 비리 문제가 확실히 터졌기 때문에, 그건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 양평

고속도로는 어느날 갑자기, 누가, 왜, 변경했느냐의 문제 아닌가. 국가 사안이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했는지 이 건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건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LH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묻자 "그렇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LH건과 관련해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다. TF위원장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선임했으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直通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